

2022년 해경승진 행정학 (2022.1.8.)

• 해설 : 이승철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짜깁기하여 출제됨(기존 기출문제 근거는 별도 표기함).

1 다음 중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지방7급 수정

| | | | | | | | | |
|-----------|------|--------|------|---|-----|-------|------|--------|
| | | 배제성 여부 | | ㉠ | ㉡ | ㉢ | ㉣ | |
| | | 배제성 | 비배제성 | | | | | |
| 경합성 여부 | 경합성 | ㉠ | ㉡ | ① | 냉장고 | 케이블TV | 목초지 | 외교 |
| | 비경합성 | ㉢ | ㉣ | ② | 라면 | 시내도로 | 일기예보 | 상하수도 |
| | | | | ③ | 자동차 | 공공납시터 | 국방 | 무료TV방송 |
| | | | | ④ | 구두 | 해저광물 | 고속도로 | 등대 |

해설

| | | | | |
|---|-------|------------|--------|------------|
| | ㉠ 민간재 | ㉡ 공유재 | ㉢ 요금재 | ㉣ 공공재 |
| | 배제·경합 | 비배제·경합 | 배제·비경합 | 비배제·비경합 |
| ① | 냉장고 | (공유지인) 목초지 | 케이블 TV | 외교 |
| ② | 라면 | | 상하수도 | 시내도로, 일기예보 |
| ③ | 자동차 | 공공납시터 | | 국방, 무료TV방송 |
| ④ | 구두 | 해저광물 | 고속도로 | 등대 |

*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는 공공재, 고속도로·유료도로는 요금재이다. 도로는 비경합성을 지니지만 이용자가 일정 수를 넘으면 경합성을 띠어 소비의 혜택이 감소하는 불완전한 경합성을 가진 혼합재라서 출근길 막힌 시내도로(무료도로)는 공유재가 되며, 귀성길에 막힌 고속도로(유료도로)는 민간재가 된다.
* ①의 목초지의 경우 공유지인 목초지는 공유재, 사유지인 목초지는 사적재에 해당한다.

답 ④

2 다음 중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본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는 구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 ② 부르디외(P. 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 ③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좋은 거버넌스의 사회적 기초를 만든다고 보고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④ 후쿠야마(F. Fukuyama)는 이탈리아 남북부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사회적 자본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해설

② (○) P. Bourdieu는 미시적 관점에서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거나, 지속적인 연결망이 유지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 및 가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았다.

• 사회적 자본 연구 동향

| 구분 | 미시적 접근 | 거시적 접근 |
|-----------|---------------------------------------------------------------------------------------------------------------------------------------------------------------------------------------------------------------------------------------------------------------------------------|-------------------------------------------------------------------------------------------------------------------------------------------------------------------------------------------------------------------------------------------------------------------------------------------------------|
| 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유형으로 파악(연결망 분석이라는 계량적 방법을 통해 연구). • 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을 지역공동체나 국가사회의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신뢰·협동 같은 호혜성에 기반을 둔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나 뒷받침하는가에 초점. • 문화나 조직의 차원에서 파악된 사회의 특성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에 관심. |
| 사회 자본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P. Bourdieu, 1986). •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산(Lin, 2001). • 사회적 연결망(network) 혹은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사회적 신뢰가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R. Putnam, 1995). • 신뢰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기대이며 국가의 복지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수준이 결정한다(Fukuyama, 1995). |

③ (○)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개념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유용성 검증과 실제로 사회자본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생산과정에서의 최소율의 법칙(식물의 생산량은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소 또는 양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법칙.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인 경우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생육할 수 없고, 원소 또는 양분 가운데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식물의 생육을 지배한다는 주장)과 같이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충족된다고 해도 사회자본이 결여되면 소기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 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자본의 축적여부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다.

- ④ (x) 퍼트남(R. D. Putnam)은 남부와 북부 이탈리아의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발전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탈리아 남북부가 보여주는 현저한 민주주의 발전의 차이를 두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서로 다른 양상을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는 개방되고 확장적인 연결망을 기초로 1차 집단을 넘어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사체의 활성화의 기반에는 모르는 타인과의 믿고 협동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일반적 신뢰와 참여적 시민문화는 국가 기구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 반면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제한된 상대를 중심으로 강하고 폐쇄적인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자발적 결사체들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강한 내집단 신뢰가 타 집단은 물론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두 지역이 보여주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과 연결된다. 즉 퍼트남의 결론은 확장적·개방적인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발달해 있으며, 이 경우 민주적 정치체도는 물론 경제적 변형에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 후쿠야마(Fukuyama)는 사회자본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일본·독일을 고신뢰사회 한국·중국을 저신뢰사회로 보았으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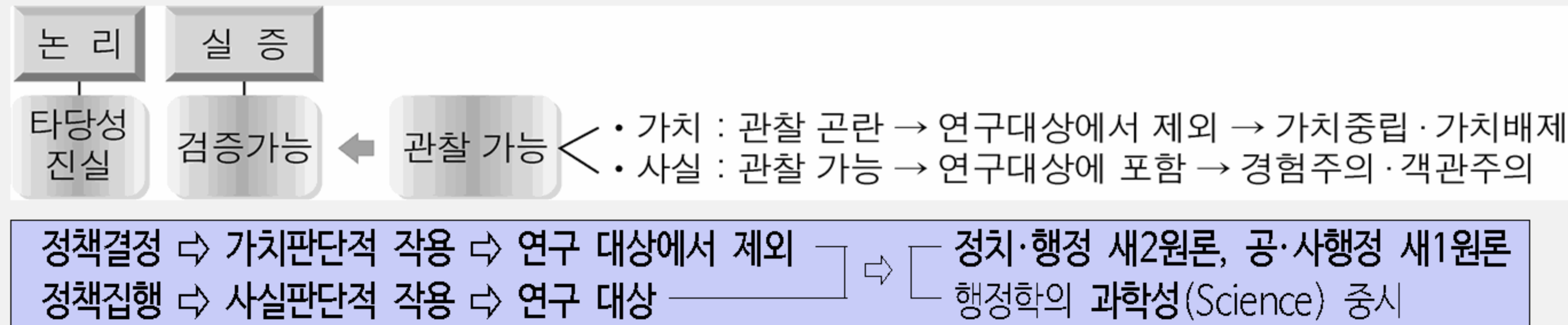
답 ④

3 다음 중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태주의는 Sayre의 법칙에 영향을 주었고, 행정학의 기술성(처방성)을 강조하였다.
- ② 행정현상 중 가치판단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③ 행태주의는 해석학을 강조한 반(反)실증주의에서 출발하였다.
- ④ 행태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새로운 가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가설을 경험적 검증 등 귀납적으로 검증한다.

해설

- ① (x)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기술성(art)보다 과학성(science)을 강조한 정치·행정2원론적 시각의 이론이다. 세이어(Sayre)의 법칙은 행정학의 기술성(art)을 강조하는 정치행정1원론적 시각이다.
 - 세이어의 법칙(Sayre's Law) :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같다.' 공·사행정이 근본적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이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행정학의 기술성(art)을 중시하는 정치·행정1원론, 공·사행정2원론적 시각이며 행정의 정치성·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다
- ② (x)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에 대한 가치중립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행정현상에 있어서 가치판단적 요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며 연구의 영역에서만 제외했을 뿐이다.



- ③ (x) 해석학을 강조한 반(反)실증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한 후기행태주의의 특징이다.
- ④ (o) 행태주의에서 법칙 발견을 위해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하는데, 설정되는 가설은 이미 확립된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반면 가설검증을 위해 현상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구체적 사실을 통해 일반원칙을 발견하므로 귀납적 검증이 이뤄진다.

답 ④

4 다음 중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 지방9급

- ① 배분정책 -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 ②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③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④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해설

- ① (x) 배분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익을 나누어주는 정책으로서 수혜집단은 개인·집단·지역사회 등 주로 특정적이지만, 비용이 일반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비용부담집단은 불특정적이다. 특정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가시성(可視性)이 낮다. 결국 일반적인 비용부담자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들만 배분주체인 정부를 상대로 배분을 요구하며 정작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국민들은 정책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특정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승자(수혜집단)와 패자(비용부담집단)간 정면대결의 필요가 없어서(non-zero sum 게임)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정책은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이다.

답 ①

5 다음 중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관한 <보기>의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09 지방7급 / 2014 지방9급 / 2017 해경간부

〈보기〉

㉠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참여하게 대립하는 상황

㉣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 ① ㉠ 환경오염규제 ㉡ 수입규제 ㉢ 한·약규제 ㉣ 음란물규제
- ② ㉠ 한·약규제 ㉡ 환경오염규제 ㉢ 수입규제 ㉣ 음란물규제
- ③ ㉠ 수입규제 ㉡ 음란물규제 ㉢ 한·약규제 ㉣ 환경오염규제
- ④ ㉠ 수입규제 ㉡ 한·약규제 ㉢ 음란물규제 ㉣ 환경오염규제

해설

㉠은 고객정치모형, ㉡은 대중정치모형, ㉢은 이익집단정치모형, ㉣은 기업가적 정치모형이다. 각 모형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 | |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 |
|--------------------|------------|--------------------------------------------------------------|-------------------------------------------------------------------------------------------------------------------|
| | | 집중(특정 소수) | 분산(불특정 다수) |
| 감지된 규제의 비용(비용부담집단) | 집중(특정 소수) | 이익집단정치모형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규제 |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모형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
| | 분산(불특정 다수) | 고객의 정치모형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 대중정치(다수제적 정치)모형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

답 ③

6 다음 중 제3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경찰간부 / 2012년 국회8급

- ① 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 ②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 ③ 제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 ④ 제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복수관점분석 등이 사용된다.

해설

- ① (○)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는 오류이다.
- ② (×)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로 인과관계에 대한 오류이다. 3종 오류는 문제 인지 및 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 ③ (○) 제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올바른 가치판단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제3종 오류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용어이다. 즉 수단적 기획관은 문제나 목표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잘못 정의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③ (○) 제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복수관점분석, 계층분석, 유추분석 등)이 활용된다.

답 ②

✎ 정책분석의 오류

정책결정자에게 제안된 정책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의 산출.

① 제3종 오류(meta error, 메타오류, 근원적 오류) - 문제 정의의 오류

- ㉠ 정책문제의 인지나 정의가 잘못되면 후속 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대안 선택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 이처럼 정책문제가 잘못 인지되거나 정의된 경우를 제3종 오류라 함(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 공식적 문제가 실질적 문제 상황을 잘못 나타내는 경우, 잘못 선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등). 예) 청년실업의 원인이 자발적 실업(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됨)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판단한 경우
- ㉡ 수단주의적 기획관(가치중립적·기술적 접근)은 목표나 가치판단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 3종 오류의 가능성이 높음.
- ㉢ 제3종 오류를 막으려면 가치판단적 요소를 고려하는 규범주의적 기획관이나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필요.

- ②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대안 선택의 오류
 ㉠ 제1종 오류(α error) : 잘못된 대안(정책)을 선택하는 오류
 ㉡ 제2종 오류(β error) : 올바른 대안(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 오류 유형 | 의 미 | 문제정의(목표설정) | 대안 선택 |
|-----------------------------|--------------------------------------------------|------------|--------------------------------------------------------|
| 제1종 오류 (α error) | 정책대안이 실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평가하여 잘못된 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 오류 없음 | 효과 없는 대안의 채택,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 옳은 귀무가설(歸無假說; 0(零)가설)을 기각 |
| 제2종 오류 (β error) | 정책대안이 실제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잘못 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 | | 효과 있는 대안의 기각,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 틀린 귀무가설(歸無假說; 0(零)가설)을 채택 |
| 제3종 오류 (meta error) | 문제 정의의 오류(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목표설정 으로 이어짐) | 오류 있음 | 문제인지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대안이 선택됨. |

7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3 국가9급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 ④ 정부가 단독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해설

② 제시된 내용은 신엘리트론의 무의사결정론이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의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 엘리트세력의 이익옹호나 보호를 위하여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이익과 의견이 무시되고 편익과 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이 영속화된다는 것이다.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득권의 이익은 보호되며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①은 다원주의, ②는 공공선택론, ④는 뉴거버넌스론(신국정관리론) 또는 정책네트워크이론과 관련된다.

답 ③

8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8급 수정

- ① 다원주의는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 ②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 ③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④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로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설

- ① (○) 다원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며, 정부 역할은 중립적·소극적 역할에 국한된다. 따라서 지배계층이나 관료의 역할보다는 이익집단 등 외부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② (○) 조합주의: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위계적·비경쟁적인 전국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고, 일면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범주의 이익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 합의가 형성되며,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 이익집단의 합의 대상은 주로 행정부. 국가는 중립적·수동적 중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주도적·능동적 실체이며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립적 실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 국가의 독자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이 강조되며, 국가는 이익집단으로부터 제약을 받지만, 법률·조직·기타 자원을 지배함으로써 자율성을 지니고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주체적으로 조정 가능.
- ③ (○) 엘리트주의(엘리트론): 권력은 불평등 분배(엘리트가 정치권력을 독점), 대중은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정보가 부족하여 엘리트에 의해 유도되고 영향을 받음. 정책과정에 대중이 참여해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고, 엘리트의 필요에 의해 제한적·명목적으로만 참여.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하향적으로만 전달·집행됨.
- ④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한다.

답 ④

9 다음 중 굴릭(Gulick)의 조직설계의 고전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화의 원리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능률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명령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통솔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부하의 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부서편성의 원리는 조직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은 수단과 절차, 자원 및 환경 등 네 가지이다.

해설

④ (x) 부서편성원리는 정부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부처를 편성할 것인가의 기준을 제시하며 부서편성의 기준으로 굴릭(L. Gulick)은 4P(Purpose, Process, People, Place)를 제시했다. 즉, 목표(기능), 절차(과정·수단·기술), 수혜자(대상, 고객, 취급물), 지역(장소)이다.

답 ④

10 다음 <보기>는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4 국가9급

-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 B. 체제이론
- C. 다원주의론
- D. 무의사결정론

- ㉠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 ㉡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 ① A-㉠, B-㉡, C-㉢, D-㉣
- ② A-㉠, B-㉢, C-㉡, D-㉣
- ③ A-㉣, B-㉡, C-㉢, D-㉠
- ④ A-㉣, B-㉢, C-㉡, D-㉠

해설

A-㉠ :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주의집중능력의 한계)

인간의 의사결정단계는 주의집중 → 설계 → 선택 순인데 정보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일시에 많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음. 조직이나 정치체제도 인간처럼 주의집중(attention directing) 능력에 한계가 있어 소수의 사회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됨. 소수의 문제만 정책문제화되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왜 특정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 지는 설명 못함 .

B-㉢ : 체제이론(D. Easton ; 체제의 문지기의 선호)

정치체제는 능력상 한계로 인해 체제 내 전체 부하(負荷)업무량의 감소를 위해 채택할 문제 수를 줄여야 함. 요구나 이슈의 정치체제나 그 하위체제에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Gate-keeping이라 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기관·집단을 체제의 문지기(Gate-keeper ; 대통령·수상 등 행정수반)라고 함. 체제의 과중한 부담(overload ; 과부하)을 회피하기 위해 체제의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만 정책문제로 채택됨.

C-㉡ : 다원주의론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정치권력의 실질적 소재의 다원화), 정치제도상 중요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요구에 따라 권한을 행사.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과정을 좌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polyarchy)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문제도 정치체제로 침투될 수 있음(R. Dahl, C. Lindblom, A. Wildavsky).

D-㉣ :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 -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의 핵심내용으로서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하므로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하여 엘리트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고 봄.

답 ②

11 다음 중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 ② 만족모형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된다.
- ③ 점증모형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합하다.
- ④ 혼합주사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계(societal guidance system)로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① (O)

| 구 분 | 합리모형 | 점증모형 | 혼합모형(기본적 결정) | 혼합모형(세부적 결정) |
|------------------|------|------|--------------|--------------|
| 고려할 대안의 수(대안탐색) | 포괄적 | 한정적 | 포괄적(전체) | 한정적(부분) |
| 각 대안의 결과예측(대안분석) | 포괄적 | 한정적 | 한정적(개괄적 예측) | 포괄적(세밀한 예측) |

② (x)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인 만족이란 심리적 성향에 의해 규정되는 주관적 합리성과 관련된다.

④ (○) 혼합주사모형을 주장한 Etzioni에 따르면 합리모형은 획일적인 전체주의 사회체제에 적합하고, 점증모형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체제에 적합한 반면, 혼합주사모형은 능동적 사회(Active Society)나 자기유도적 사회(Self Guiding Society)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tzioni는 혼합주사모형을 인간의 미시적 결정행태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체계의 조직원리로 발전시켜,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에 대한 자원배분의 문제는 정책분석가의 미시적인 분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거시적·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차원의 결정체제를 '범사회적 지도체제 (societal guidance system)'라고 하였다.

답 ②

12 다음 중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집단과 비전문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설

① (x) (전통적)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더 합리적인 idea를 도출하는 방법. 전문가 1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문제의 예측·진단·결정시 토론 없이 의견일치를 볼 때까지 설문을 반복해 전문가집단(일반인 x, 비전문가 z)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분석·종합. 비계량적·주관적·직관적·질적 예측기법으로 널리 활용.

② (○) Brainstorming(브레인스토밍, 난상토론, 집단토의, 두뇌선풍) : 오스본(A. Osborn)이 창안한 집단토론기법. 아무런 제약 없이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대면접촉을 유지하며 토의를 통해 창의적 의견이나 기발한 idea를 창안하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 다수 구성원이 하나의 주제(여러 주제)를 두고 idea를 무작위로 개선해 그 중 가장 좋은 해결책 모색. idea 제안 단계에서는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금지(non-evaluation)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

③ (○) 지명반론자기법(악마의 주장법, devil's advocate method) : 집단을 둘로 나눠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또는 집단)을 반론 제기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약점을 지적해야 함)을 듣고 제안자의 옹호과정을 통한 토론을 거쳐 원래 대안을 수정·보완하면서 최종대안을 도출(변증법적 토론과 유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므로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적응성이 높아짐.

④ (○)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method) :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각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 구상)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제한된 토론(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투표로 의사결정(표결)을 하는 방법(델파이 기법과 달리 토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함).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들은 명목적으로만 집단이 됨. 토론의 방만한 진행을 예방하고 좋은 의견이 고르게 개선될 수 있지만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전자적 회의 방법은 명목집단기법에 컴퓨터 기술을 접목시킨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고 컴퓨터를 통해 표결하는 방식을 활용.

답 ①

13 다음 <보기>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2014 국가7급 수정

-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x)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하며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

답 ③

14 다음 중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경정승진

- ①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는 정책 변동의 유형으로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승계, 정책혁신을 들고 있다.
- ② '정책혁신'은 기존 정책수단이 없는 무(無)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 ③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 ④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원인으로는 매몰비용, 법적제약, 동태적 보수주의 등이 있다.

해설

③ (x)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유지이다.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되 의도적으로 정책의 기본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정책내용,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을 대폭 수정·변경하거나 이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책승계는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 점은 정책유지와 유사하나 정책수단인 사업,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에서 중대한 변화(대폭 변경, 수단 자체의 변경 포함)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소폭변경(산출이나 정책수단 일부 조정)인 정책유지와 차이가 있다.

| | | | |
|------|--------------------|-------------------|--------------------------------------------------------------------|
| 정책유지 | 목표 유지 예) 청년실업해결 | 적응적(adaptive) 변화 | 소폭 변경(산출이나 정책수단 일부 조정), 기본적 성격 유지 예) 청년인턴제 대상 기업 및 지원금액 조정 |
| 정책승계 | | 의도적(purposive) 변경 | 대폭 변경(수단 자체의 변경 포함), 기본적 성격 변화 예) 청년인턴제를 폐지하고 청년실업자 구직촉진수당제로 전환 |

답 ③

15 다음 <보기> 중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 국회8급

-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 구조이다.
- ㉡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하였다.
- ㉢ 기능부서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게 된다.
- ㉣ 일원적 권한 체계를 갖는 데 그 기본적 특성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형태만 결합하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성질까지 변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 (○) 매트릭스구조는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종적인 기능구조와 횡적인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원적 조직구조이다.
 ㉢ (x) 기능부서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게 된다.
 ㉣ (x) 기능부서와 사업부서를 교차시킨 이원적 권한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답 ③

16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 <보기>에서 유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넓은 직무범위 ㉡ 고층구조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 예측 가능성 추구 ㉤ 분업적 과제 ㉥ 모호한 책임관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은 유기적 조직, ㉢㉣㉤은 기계적 조직의 특성이다.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 구 분 | 기계적 구조(전통적 구조) | 유기적 구조(현대적 구조) | |
|----------|------------------|------------------------------|-----------------------------------------|
| 조직 특성 | 직무범위 | 좁은 직무범위(한계가 명확) - 과업의 전문화 | 넓은 직무범위(한계가 불명확) |
| | 공식화 | 공식성 높음(통제 중심) - 표준운영절차(SOP) | 공식성 낮음(재량·신축성 중심) - 적은 규칙·절차 |
| | 책임성 | 분명한 책임관계 | 모호한 책임관계 |
| | 의사소통 | 계층제 | 분화된 채널(다양한 의사전달 통로·수단) - 네트워크구조 |
| | 구성원 간 관계 | 공식적·물인간적 대면관계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
| | 계층의 수 | 고층구조(수직적 분화 높음) - 통솔범위 좁음 | 저층구조(수직적 분화 낮음) - 통솔범위 넓음 |
| | 업무지시방식 | 명령과 지시, 통제 | 정보제공과 권고, 자발적 몰입 |
| | 의사결정방식 | 일방적 결정 | 참여에 의한 결정 |
| | 환경에의 적응 | 적응성 낮음 | 적응성 높음 |
| | 보 상 | 계급(계층)에 따른 큰 차이 | 계급(계층)에 따른 작은 차이 |
| | 조직구조의 경직성 | 높음(경직적·영속적 구조) | 낮음(임시적·신축적 구조) |
| 상황 조건 | 대표적 조직 | 관료제 | 학습조직 |
| | 조직목표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 | 과제의 성격 |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독자적 수행) |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공동 수행) |
| | 성과측정 | 성과측정 가능 | 성과측정 곤란 |
| | 동기부여 | 금전적 동기부여 | 복합적 동기부여(금전 + 자아실현 + 성취감 등) |
| | 권 위 | 권위의 정당성 확보 권위의 근거는 공식적 지위 | 도전받는 권위(권위의 유동성) 권위의 근거는 정보 및 문제해결능력 |
| 환경 상황 | 안정적 상황, 예측가능성 높음 | 불안정한 상황, 예측가능성 낮음 | |

답 ①

17 다음 중 대리인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 군무원7급

-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 때문에 합리성은 제약되며, 따라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 ② 대리인이 자기 자질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불균형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③ 이기적인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유동적이어서 자산 특정성이 낮으면, 조직 내의 여러 관계나 외부공급자들과의 관계가 고착되어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라도 이를 바꾸기 어렵다.

해설

합리적 선택과 주인의 통제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대리인이론)

- ㉠ 합리성의 제약: 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 부족 때문에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곤란함.
 - ㉡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태: 대리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주인(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며(정보의 불균형성·비대칭성), 주인은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이기적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리손실(주인의 역선택[불리한 선택],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발생.
 - ㉢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specificity):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고정적·특정적이면 조직 내의 관계나 외부공급자와의 관계가 고착화되고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라도 이를 개선하기 곤란함.
 - ㉣ 소수 독점이나 과점: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잠재적 당사자(대리인)의 수가 적으면 불리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짐.
- ② (○) 주인-대리인 관계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쪽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다른 당사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 경우 의뢰하는 측을 주인, 의뢰받는 측을 대리인이라 한다. 대리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주인(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며(정보의 비대칭성) 이 경우 이기적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위임자(주인)는 위임업무처리에 관하여 대리인보다 능력이나 정보면에서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된다.
- ③ (○)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손실(위임자[주인]의 역선택과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이 발생하며, 대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 대한 통제 강화, 인센티브 메커니즘, 정보의 균형화 장치 등이 필요하다.
- ④ (x)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고정적·특정적이면(자산의 특정성이 높음) 조직 내의 관계나 외부공급자와의 관계가 고착화되고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라도 이를 개선하기 곤란하다.

답 ④

18 다음 중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지방9급(하)

-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설

- ① (x) 정책 딜레마 상황은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가치 간 갈등이나 가치 간 비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결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 ② (○)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비결정, inaction)도 정책딜레마에 대한 소극적 대응 형태의 하나이다.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 행태

| 소극적 대응 | 적극적 대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비결정, inaction) ② 정책결정의 지연(procrastination)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의 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 유도 ② 하나의 딜레마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딜레마 상황 조성 ③ 정책문제의 재규정 시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들을 동시에 선택 ⑤ 스톱-고 정책(stop-go policy; 쉼바꾸기 전략) 채택 ⑥ 선택한 대안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조작 |

- ③ (x) 정책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대안이란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 ④ (x) '단절성(분절성, discreteness)'이란 대안들을 비교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고, 타협이 어려워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제약(time limit)'이며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동시 선택 또는 동시 포기 불가)은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이다.

■ **딜레마의 구성요소(필요조건)**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딜레마가 발생.

- ㉠ **분절성**(단절성, discreteness) :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 대안들이 서로 단절적임(대안들을 비교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고,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
- ㉡ **상충성**(trade-off) :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 함.
- ㉢ **균등성**(equality) :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유사)함.
-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함(동시 선택 또는 동시 포기 불가).
- ㉤ **시간 제약**(time limit) :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선택)해야 함.

답 ②

19 다음 <보기>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4 국가7급 수정

- ㉠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 ㉡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 ㉢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 ㉤ 전기와 고속도로는 전형적인 유료재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2014년 국가직 7급 문제를 ㉠만 수정하여 출제했지만 ㉠은 출제 당시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어 논란이 되었던 지문인데 그대로 다시 출제됨. 해경승진 문제 출제자는 2014년 국가직 7급 문제 정답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을 틀린 것으로 보고 출제된 것으로 보임.

- ㉠ (○) 무임승차문제의 근본원인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이다.
- ㉡ (○)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공급의 결정과 생산의 집행을 정부가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비록 정부에 의해 공급이 결정되어도 그 집행(생산)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예 contracting-out, franchising, 바우처, 보조금 방식)이 증대되고 있다.
- ㉢ (x) 상하수도나 교통관리 등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지방공공서비스에 해당하나, 건강보험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사회보험)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 ㉣ (x)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의 의미를 '공적 유도(보조금)'나 '정부규제(권위)'에 비교되는 '공적 공급(직접공급)'으로 본다면, 공공재의 존재는 공적 공급으로 대응하나,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공급이 아니라 공적 유도 또는 정부규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틀린 내용이 된다. 단,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의 의미를 '정부의 직접 공급' 외에도 '정부의 관여나 개입이 요구된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경우 옳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예 유기농산물 인증, 직업면허제도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

■ **시장실패 원인별 대응방식**

| 구 분 | 공적 공급(조직) | 공적 유도(유인, 보조금) | 정부규제(권위) |
|------------|-----------|----------------|----------|
| 불완전경쟁(독과점) | | | ○ |
| 자연독점(요금제) | ○ | | ○ |
| 정보의 비대칭성 | | ○ | ○ |
| 외부효과의 발생 | | ○(외부경제) | ○(외부비경제) |
| 공공재의 존재 | ○ | | |

- ㉤ (○) 전기와 고속도로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요금제(유료재)로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문제로 인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가하게 된다.

답 ②

[관련 기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국가7급

- ㉠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 ㉡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 ㉢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 ㉤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④로 처리됨.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을 옳은 지문으로 보았으나 틀린 지문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되었음. 위 2022년 해경승진 문제는 2014는 국가직 7급 문제의 ㉠번만 유료재로 변형하여 출제했고 ㉠을 틀린 지문으로 처리함.

20 다음 중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국가9급

-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다.

해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를 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 ② (x) 막료조직인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임.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임.
- ③ (x)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임. ‘하부조직’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함.
- ④ (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의결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표시권)을 가진 합의제 행정관청(행정청)으로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의사결정권(의결권)과 집행권을 갖는 행정위원회이므로 자문기관[자문위원회]도 아니다. ‘자문기관’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를 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답 ①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 |
|---------|-------------------------------------------------------------------------------------------------------------------------------------------------------------------------------------------------------------------------------------------------------------------------------------------------------------------------------------------------------------------------------------------------------------------------------------------------------------------------------------------------------------------------------------------------------------------------------------------------------------------------------------------------------------------------------------------------------------------------------------------------------------|
| 중앙 행정기관 |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단, 관할권 범위가 전국이라도 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
| | <p>특별지방 행정기관</p> <p>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p> <p>부속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① 자문기관 :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를 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② 기타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등 |
| 하부조직 | <p>보조기관 (補助機關) 계선조직</p> <p>행정기관의 의사나 판단의 결정·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p> <p>■ 정부조직법 2조 3항·4항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p> |
| | <p>보좌기관 (補佐機關) 참모(막료) 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함. ② 보좌기관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 <p>■ 정부조직법 2조 5항 :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장,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 차관보 : 행정각부에는 차관보를 둘 수 있음(필수기관 아님). 차관보는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을 직접 보좌. 하부조직을 둘 수 없음. *차관보는 보좌기관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참모조직으로서 기능은 유사함</p> |

21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킹슬리(Kingsley)가 1944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③ 우리나라의 저소득층할당임용제, 과학기술인재 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 ① (○)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엽관주의 폐단을 극복하는 인사제도는 실적주의이다.
 - 킹슬리(J. Kingsley) : 「대표관료제(1944) ; 영국관료제의 해석」. 대표관료제이론은 영국의 관료제를 연구한 Kingsley에 의해 처음 제기됨. 당시 영국 관료제의 상위직이 대부분 중상층 출신으로 충원되어 그 인적구성에 있어 사회경제적 계층의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관료제가 모든 사회계층의 이해와 요구에 보다 대응적(responsive)이기 위해서 **관료가 중요한 모든 사회계층으로 부터 충원되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가 관료제 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② (○) 관료가 출신집단에 대한 주관적·심리적·내재적·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모든 사회집단에 의한 대중통제를 관료제나 공무원 내부로 내재화시키는 장치이며 관료집단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집단 간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내부적·비공식적·사전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
 - ☑ 대표관료제에 의한 행정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인 민중통제이다.(x)
 - ☑ 대표관료제에 의한 행정통제는 민중통제[대중통제]를 내재화시킨다.(○)
- ③ (○) 저소득층임용할당제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과학기술인재 채용목표제는 없고 이공계전공자 우대제도가 있음. 단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진목표제는 존재.
 -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Balanced - Personnel) 기본계획 내용 중 이공계전공자 우대 및 저소득층임용할당

| | | |
|----------|-----------|-------------------------------------------------------------------------------------------------------------------------------------------------------------------------------------------------|
| 이공계 전공자 | 이공계전공자 우대 | 정부 전체 5급 및 이에 준하는 신규채용 총 인원의 40%(연구직·지도직은 산정비율에서 제외)를 이공계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급 인력수급계획 수립 시 연도별 기술직 채용 목표 설정·추진 |
| 사회 통합 인재 | 저소득층임용할당 | 9급 공채시험(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인 경우)의 2% 이상을,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2명 이상인 경우)은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 | 기 타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균형인사 정책 마련 예정 |

- ④ (○) 전문적 능력이 미흡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전문성·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음

답 ①

22 다음 중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단기 성향, 보편주의-특수주의, 남성성-여성성, 성취-귀속을 포함하고 있다.
- ②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보다 현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적응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③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을 되도록 적게 만들려고 한다.

해설

- ① (x) 보편주의-특수주의, 성취-귀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6가지 문화차원 :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위험선호-회피), 장기-단기 성향, **쾌락추구-절제**, 남성성-여성성, **개인주의-집단주의**, 쾌락추구와 절제
- ② (x)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과거)·현재와 관련된 가치보다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
 - 장기 지향적 사회 :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 부여. 지속성, 절약, 적응능력 등 보상을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를 조성 - 실용주의
 - 단기 지향적 사회 : 끈기, 전통에 대한 존중, 호혜성, 사회적 책임 준수 등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 중시.
- ③ (○)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사회적 권력 및 권위가 구성원들 간에 다르게 행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수용도 및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권력거리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x)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초조와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을 꾀한다.

답 ③

※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

호프스테드는 IBM 근무 당시 70여 개국 약 10만명의 IBM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국가별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6가지로 제시.

| | |
|-----------------------------------------------|-----------------------------------------------------------------------------------------------------------------------------------------------------------------------------------------------------------------------------------------------------------------------------------------------|
| 권력 거리 [권력격차] (power distance) | 조직이나 단체(가족과 같은)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 ① 낮은 권력 거리[권력격차] - 평등주의 : 권력관계가 상호의존적 민주적임. 사람 사이 관계는 형식적 위치에 관계 없이 평등하고, 하급자가 권력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② 높은 권력 거리[권력격차] - 권위주의·계서주의 : 권력이 작은 측이 전제적 가부장적 권력 관계를 그대로 수용. 구성원 간 권력배분의 차이가 크며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경향이 강함 |
| 개인주의 / 집단주의 (individualism / collectivism) |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가의 정도. ① 개인주의 : 개인적 성취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 자신과 직계 가족을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결정. ② 집단주의 : 사회전체, 소속집단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높음.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도나 관행 상 자원배분이나 보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을 기준으로 함. |

| | |
|---------------------------------------------------|------------------------------------------------------------------------------------------------------------------------------------------------------------------------------------------------------------------------------------------------------------------------|
|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하려는 정도. ① 불확실성 회피(안정지향, 보수성) : 보다 감정적인 경향, 알 수 없거나 이례적인 환경의 발생을 최소화, 사회 변화에 있어 계획과 규범, 법과 규제를 이용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태도. ② 불확실성 감수(변화 지향, 개방성) : 비체계적 상황이나 가변적 환경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규칙은 되도록 적게 만듦. 보다 실용적이며, 변화에 관용적임. |
| 남성성 / 여성성 (masculinity / femininity) | 성별 간 감정적 역할의 분화. ① 남성적 문화 : 경쟁력, 자기주장, 유물론, 야망, 권력 등 중시. 성취를 이룩하는 사람이 존경 받음. 성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음.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향. ② 여성적 문화 : 대인관계나 삶의 질을 보다 높게 평가. 표면적 성공이 큰 존경을 받지 못함. 정숙이나 헌신 같은 개념을 남녀 양성이 똑같이 강조 받음. |
| 장기/단기 지향성 (long/short term orientation) | 사회의 시간범위를 설명. ① 장기 지향적 사회 :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 부여. 지속성, 절약, 적응능력 등 보상을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를 조성 - 실용주의 ② 단기 지향적 사회 : 끈기, 전통에 대한 존중, 호혜성, 사회적 책임 준수 등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 중시. |
| 쾌락추구 / 절제 (indulgence / restraint) | 사회구성원의 자신의 욕구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 ① 쾌락 추구 : 대체로 낙관적이고 삶을 즐기려는 경향. 여가생활과 휴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 ② 절제 : 비관적·냉소적 경향, 여가생활·취미활동 욕구가 낮고, 이런 활동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도 함 |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권력격차가 크며(권위주의),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강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으며(안정주의), 여성성이 강하고(온정주의), 장기지향성이 강하며, 절제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경쟁적이고, 성취위주 사회로 보이지만 여성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봐주기, 정상참작, 법과 규정에 대한 융통적인 자세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사들이 국민의 진전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23 다음 중 <보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교육행정9급

A 파출소장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 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해설

제시된 내용은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동기·위생이론)과 관련된다. 상관의 감독방식, 작업조건은 불만요인(위생요인)으로 충족될 경우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만 있을 뿐이며, 근무태도변화에 단기적 영향만 미치므로 동기유발이나 생산성 향상의 직접적 조건이 되지 못한다. 성취감, 책임감, 자기존중감은 만족요인(동기요인)이어서 충족될 경우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고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며,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 허즈버그의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유발 또는 불만해소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 • 불만요인 개선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됨. • 불만요인 개선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 •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됨. • 만족요인 불충족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 •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 •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 |
| 조직의 정책과 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근무 시간, 정년, 지위나 직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는 일), 성장·발전,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승진, 자아개발, 직무성과, 책임의 증대, 칭찬 |

답 ④

24 다음 중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찰간부후보생

-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② TQM은 상하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 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 ① ③ (○) 총체적 품질관리란 고객만족을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원칙이다.
- ② (×)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내용이다.
- ④ (○) 고객중심의 관리전략에서는 외부고객은 물론 내부고객의 만족도 중시한다.

답 ②

25 다음 <보기> 중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2014 국가9급

- ㉠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 ㉠ (x) 엽관주의는 정당이 임명하는 체제로서 선거공로를 임용기준으로 삼는다. 지문은 정실주의에 해당된다.
- ㉡ (x)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므로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민주주의를 구현한 인사제도이다.
- ㉢ (○) 엽관주의는 정당지도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므로 정치지도자의 국정 장악력 또는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 ㉣ (○)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에 대두되어 등장한 인사제도로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고 실적만을 고려한 임용을 하게 되므로 형식성, 소극성, 비대응성, 집권성, 비형평성 등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 ㉤ (x)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강조함에 따라 관료체제로 이어져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이 낮아진다.

답 ④

26 다음 중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지방9급(하)

-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해설

• 직무평가의 방법

| 특 징 | | 직무와 기준표 비교(절대평가) | 직무와 직무 비교(상대평가) |
|--------------|------------|------------------|-----------------|
| 비계량적(주관적) 방법 | 직무전체 파악 | 분류법(정부에서 주로 사용) | 서열법 |
| 계량적(객관적) 방법 | 직무구성요소별 파악 | 점수법(사기업에서 주로 사용) | 요소비교법 |

- ① (x) 서열법은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직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주관적 평가방법이다. 평가작업이 단순·신속하며, 비용·노력이 적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순위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 ② (x) 점수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비중을 결정하고, 몇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일정점수를 부여한 직무평가기준표를 작성한 후,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합계하여 각 직위의 총점차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체계적·과학적인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므로 평가결과의 타당도·객관도가 높고, 관련자가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있어 직무평가의 일관성이 높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노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 ③ (x) 요소비교법은 요소비교표를 만들기까지 복잡한 과정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점수법이다.
- ④ (○)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직무요소에 대한 분석 없이 분류기준을 미리 작성한 등급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려는 직위의 직무를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는 직무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답 ④

✚ 직무평가의 방법

| 구 분 | 분류법 | 점수법 | 서열법 | 요소비교법 |
|---------|--------------|-----------------------|---------------------------|-----------------------------------|
| 특징 | 등급기준표에 직무 배치 |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요소 별 배점 | 서열을 전체적으로 평가 가장 일찍 개발된 방법 | 대표직위 선정과 요소별 보수액 배분. 가장 늦게 개발된 방법 |
| 비교방법 | 직무와 기준표 | 직무와 기준표 | 직무와 직무 | 직무와 직무 |
| 평가대상 | 직무전체 | 직무의 평가요소 | 직무전체 | 직무의 평가요소 |
| 평가방법 | 비계량적 방법 | 계량적 방법 | 비계량적 방법 | 계량적 방법 |
| 평정요소의 수 | 없음 | 평균 11개 | 없음 | 5~7개 |
| 척도의 형태 | 등급 | 점수, 평가요소별 | 서열 | 점수, 대표직위(기준직무) |
| 사용빈도 | 보통 | 가장 많음 | 가장 적음 | 보통 |

| | |
|--------------------------------------------|--------------------------------------------------------------------------------------------------------------------------------------------------------------------------------------------------------------------------------------------------------------------------------------------------------------------------------------------------------------------------------------------------------------------------------------------------------------------------------------------------------------------------------|
| 서열법 (ranking method) | ① 의의 : 가장 간단하며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직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주관적 평가방법. 직무평가 담당자가 대상조직의 직무를 모두 잘 파악하고 있고 직무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 ② 장·단점 : ㉠ 평가작업이 단순·신속하며, 비용·노력이 적음. ㉡ 분류될 직위가 복잡하고 수가 많으면 적용 곤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순위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공정성 시비가 있음, 분류될 모든 직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류담당자를 구하기 어려움. |
| 분류법 (classification method) | ① 의의 :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직무요소에 대한 분석 없이 분류기준을 미리 작성한 등급기준표 에 따라 평가하려는 직위의 직무를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② 장·단점 : ㉠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고, 서열법보다 세련된 방안으로서 정부부문에서 많이 사용. ㉡ 등급 정의 작업(등급기준표 작성)이 곤란하고 등급 기준이 명확히 차별화되지 않으며 평가할 직위가 많거나 직위가 복잡하면 유용성이 떨어짐. |
| 점수법 (point method) | ① 의의 :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비중을 결정하고, 몇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일정점수를 부여한 직무평가기준표를 작성한 후,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요소별로 점수 를 매기고 합계하여 각 직위의 총점차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 계량적 척도 활용과 평가의 명료성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됨.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에도 적용. ② 장·단점 : ㉠ 체계적·과학적인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므로 평가결과의 타당도·객관도가 높음, 관련자가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있어 직무평가의 일관성이 높음. ㉡ 절차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노력 요구, 평가요소의 단계구분과 비중결정이 명확한 객관성을 가지기 곤란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필요. |
| 요소비교법 (factor-comparison method) | ① 의의 :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으로 점수법의 단점인 평가요소의 비중결정과 단계구분에 따른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려는 기법. 평가할 직위에 공통되는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대표직위(key position ; 표준직무·중심직무) 를 선정하여 그 평가요소별 서열을 정한 후, 대표직위의 보수액을 평가요소별로 배분 하여 제시. 이를 토대로 분류대상 직위의 평가요소별 서열에 따른 보수액을 배분하여 그 보수를 결정하고, 각 직위의 보수액 차이에 의해 직위의 등급이 결정됨. ② 장·단점 : ㉠ 분류대상 직위를 대표직위와 비교하므로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대표직위의 각 단계에 골고루 분포된 것을 선정하므로 평가범위가 넓어 분류대상 직위가 많은 경우 유리. ㉡ 대표직위 선택이 잘못되면 전체 분류대상 직위의 평가가 잘못될 수 있음, 대표직위의 평가요소별 서열결정에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가 필요, 요소비교표 작성에 많은 시간·노력 필요. |

27 다음 중 근무평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쇄효과 : 평정권자가 피평정자인 특정 직원이 평소 용모가 단정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
- ② 규칙적 오류 : 근무성적 평정 시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로 평가
- ③ 집중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도록 평가
- ④ 시간적 오류 :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 또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해설

- ③ (x)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도록 평가하려는 경향은 관대화 경향이다. 집중화 경향은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 | | | | | | | |
|------------------------------------------------|-------------------------------------------------------------------------------------------------------------------------------------------------------------------------------------------------------------------------------------------------------------------------------------------------------------------------------------------------------------------------------------------------------------------------------------------------------------------------------------------------------------------------------------------------------------------------------------------------------------------------------------------------------------------------------------------------------------------------------------------------------------------------------------------------------------------------------------------------------------------------------------------------------------------|-----------------------|--------------------------------------|---------------|----------|----------------------------------------|-----------------------|
| 연쇄효과 (헤일로 효과 ; halo effect, 후광·현혹효과) | ① 의의 :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 특징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일반적 인상이 모든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나의 장점이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게 하거나 하나의 단점이 모든 것은 나쁘게 평가). 예) 외모가 단정하면 신뢰성에도 우수한 평정,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 ② 방지 방안 ㉠ 강제선택법이나 프로브스트법(평정요소 간 연쇄효과 배제) ㉡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 ㉢ 평정요소별 배열순서에 유의(평정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요소의 배치를 멀리 떨어지게 함) ㉣ 평정척도를 만들 때 등급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 | | | | | | |
| 분포상의 착오 (distributional error) | ① 유형 ㉠ 집중화 경향 (central tendency) :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수준의 점수나 가치를 주는 심리적 경향. 평정상 의문이 있거나 피평정자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 모험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모든 것이 평균이라는 평정을 하게 됨.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거나 평정에 자신이 없을 때 책임회피 수단으로 발생. ㉡ 관대화 경향 (leniency tendency) : 하급자외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평정결과 분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쪽에 집중됨(실제보다 높게 평가). ㉢ 엄격화 경향 (severity tendency) : 평정결과 분포가 열등한 쪽에 집중(실제보다 낮게 평가) ■ 분포적 오류와 상관관계적 오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분포적 오류</td> <td style="width: 50%;">근무성적의 분포가 실제의 직무성과의 분포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td> <td style="width: 30%;">관대화, 엄격화, 집중화</td> </tr> <tr> <td>상관관계적 오류</td> <td>평가요소들 또는 특정 피평정자들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하게 되는 오류</td> <td>연쇄효과, 논리적 오류, 유형화의 오류</td> </tr> </table> ② 분포상 오류의 방지 방안 ㉠ 강제배분법(강제할당법)·서열법 사용 ㉡ 집중화 방지를 위해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사용 ㉢ 평정요소의 중요성이 평정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중간을 택할 수 없는 체크리스트법 활용 | 분포적 오류 | 근무성적의 분포가 실제의 직무성과의 분포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 |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 상관관계적 오류 | 평가요소들 또는 특정 피평정자들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하게 되는 오류 | 연쇄효과, 논리적 오류, 유형화의 오류 |
| 분포적 오류 | 근무성적의 분포가 실제의 직무성과의 분포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 |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 | | | | |
| 상관관계적 오류 | 평가요소들 또는 특정 피평정자들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하게 되는 오류 | 연쇄효과, 논리적 오류, 유형화의 오류 | | | | | |

| | |
|-----------------------------------------------|--------------------------------------------------------------------------------------------------------------------------------------------------------------------------------------------------------------------------------------------------------------------------------------------------------------------------------------------------------------------------------|
| 규칙적·체계적·일관적 오류 (systematic or constant error) | ① 평정자의 가치관 및 평정기준의 차이에 의하여 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오차로써,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주거나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이는 평정자가 가진 평정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됨. 예) A평정자는 항상 좋게 평정, B 평정자는 항상 나쁘게 평정. ② 평가 목적이 감시 목적일 경우에는 낮게 평가되기 쉽고, 관리 목적일 경우에는 높게 평가되기 쉬움. ③ 강제배분법은 일관적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 |
| 시간적 오류 | ① 근점(근시성·최근성·막바지)효과(recency·proximity error) : 오래된 실적보다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현상. ② 최초(초두·첫머리)효과(primacy effect) : 근점오차와 반대로 첫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데서 오는 오류. ③ 시간적 오류 방지 방안 : MBO식 평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 활용 - 결과로 나타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나 중요사건기록법을 사용하거나, 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정 |

답 ③

28 다음 <보기> 중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형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2012 해경간부

- ㉠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의 기관장은 행정수반이 임명한다.
- ㉡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 ㉢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 ㉣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에 해당한다.
- ㉤ 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모두 옳은 내용이다.

답 ④

| 독립·합의제형 중앙인사기관과 비독립·단독제형 중앙인사기관 | | |
|---------------------------------|------------------------------------------------------------------------------------------------------------------------------------------------------------------------------------------------------------------------------------------------------------------------------------------------------------------------------------------------------------------------------|--------------------------------------------------------------------------------------------------------------------------------------------------------------------------------------------------------------------------|
| 구분 | 독립·합의제형 | 비독립·단독제형 |
| 의의 | 중앙인사기관이 일반행정부처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체로 구성 |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됨. |
| 사례 | 미국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영국 인사위원회(CSC ; Civil Service Commission), 일본 인사원 | 미국 인사관리처,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일본 내각관방의 내각인사국, 프랑스 인사행정처(총리 직속), 우리나라 인사혁신처(국무총리 소속) |
| 장점 | ① 업관주의적 영향력 배제,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실적제 발전에 유리. ② 합의체에 의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1인에 의한 전횡·독단 방지), 중요 이익집단 대표자를 참여시켜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 가능. ③ 합의체 구성원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 (staggering term, 임기시차제). ④ 단독책임자가 아닌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다른 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계를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음. | 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사행정의 수행하므로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화. ② 단일 지도층으로 형성되므로 중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가능. ③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관리도구로 삼아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추진 이 가능하므로 능률적 행정 수행. ④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 가능. |
| 단점 | ①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불분명과 책임전가. ② 합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사정책 결정의 지연. ③ 독립합의형의 목적은 업관주의 방지이므로 인사행정의 적극화나 전문화 곤란. ④ 구성원이 양당적 또는 초당적 비전문가이므로 전문적 인사문제를 다룰 때 비능률성·비합리성 우려. ⑤ 행정수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곤란함. ⑥ 일상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부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고, 합의제 형태의 조직구조이므로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 곤란. | ① 단독제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 에 대한 통제 곤란. ② 인사행정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결여로 인해 인사행정의 업관화·정실화 우려. ③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행정의 일관성·계속성 결여. ④ 행정수반이나 내각에 소속되므로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곤란. |

* 일본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 총무청 인사국 → 총무성 인사은급국(2001년) → 내각관방 내각인사국(2014년, 간부인사의 일원적 관리, 인사원 및 총무성이 맡아온 공무원 채용시험 및 연수기획, 기구의 신설·개편, 정원관리 등 인사행정 사무를 일괄적으로 담당)

29 다음 중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키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용이하다.
-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에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 학습 방법이다.
- ④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해설

① (×)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직장훈련)은 평상시 근무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가는 훈련으로서 상사나 동료 간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하지만, 특별한 계획 없이 일을 평소에 하면서 배우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곤란하다.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용이한 것은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 직장 외 훈련)이다.

■ 현장훈련(OJT)과 교육원훈련(OFF JT)

| 구분 | 현장훈련(직장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교육원훈련(OFF JT : Off-the-Job Training) |
|----|-----------------------------------------------------------------------------------------------------------------------------------------------------------------------------------------------------------------------------------------------------------------------------------------------------------------------------------------------|--------------------------------------------------------------------------------------------------------------------------------------------------------------------------------------|
| 의미 |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나 선임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 |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장소와 시설에서 예정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 |
| 예 | 실무지도, 직무순환(전직·전보), 임시배정(임시대역), 실무수습(internship), 시보 | 강의, 회의·토론, 사례연구, 역할연기, 분임토의, 모의실험, 감수성훈련, 시찰·견학 등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이 실제적(추상적×)이며 OFF JT보다 실시 용이. ② 직책의 성격이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 정밀성을 요구하는 경우의 훈련(전문교육훈련)에 적합^{주1)} ③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향상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유발, 학습의 전이(轉移)가 용이함. ④ 상사나 동료 간 이해와 협동정신 강화·촉진. ⑤ 낮은 비용으로 가능, 훈련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음. ⑥ 구성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 업무수행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 ② 많은 종업원들에게 동시에 교육 가능. ③ 전문적인 교관이 실시. ④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하므로 교육효과가 높음.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수한 상관이 반드시 우수한 교관은 아님. 전문교육시스템과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힘들. ② 일과 훈련 모두 소홀할 수 있음. ③ 많은 구성원을 동시에 훈련 곤란(적은 수의 인원만 가능). ④ 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통일시키기 곤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훈련결과를 현장에 바로 활용 곤란. 학습의 전이가 곤란함. ② 훈련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어 부서에 남아있는 종업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남. ③ 비용이 많이 듦. |

· 주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이 원칙(직장훈련 곤란시 교육훈련기관이 실시, 교육훈련기관이 실시 곤란시 위탁교육훈련)

② (×)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은 사건처리연습(incident method)이다.

■ 모의연습·가상훈련(simulation) : 직무수행시 직면할 가상적 상황을 설계해 놓고, 이에 대처하게 하는 것.

㉠ 장점 : 실제 상황에서 나타날 오류의 사전검토, 업무에의 관심·흥미를 자극하고 동기부여.

㉡ 단점 : 시간·비용 과다.

㉢ 종류

㉠ 관리연습·경영연습(management game) : 조직 전체나 어느 한 부분의 운영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피훈련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보게 하는 방법.

㉡ 정보처리연습(in-basket method, 관리함기법) : 조직운영 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돈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 후 피훈련자가 그것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어 그에 기초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법. 각종 서류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하게 하는 사례연구나 게임트레이닝의 한 방법.

㉢ 사건처리연습(incident method) : 어떤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을 피훈련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 피훈련자는 교관에게 물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얻으며 피훈련자의 정보활용능력 배양.

④ (×)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의연습·가상훈련)에 대한 설명임

· 역할연기(role-playing) : 실제 직무수행 상황과 유사한 가상적인 어떤 사례(주로 인간관계, 상하관계)를 몇 명의 피훈련자가 나머지 앞에서 부여받은 역할(보통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의 역할을 부여)을 실제 행동으로 연기하고,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그 연기내용을 비평·토론하도록 한 후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

답 ③

30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률과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 ① (×)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므로,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지만 단순히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로 형성되지는 않음. 양자는 형식·대상이 서로 달라 성질·효력이 다르므로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 ③ (×) 법률안은 국회나 정부 모두 제안 가능,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 ④ (○)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삭감 또는 비목의 폐지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는 정부 동의 필요

답 ④

예산과 법률

| 구 분 | 예 산 | 법 률 |
|----------------|-----------------------------------------------------------------------------------------------------------------------------------------------------------------------------------------------------------------------------------------------------------------------------------------------------------------------------------------------------------------------------------------------------------------------------------------------------------------------------------------------------|-------------------------------------------|
| 제출·제안권자 | 정부(행정부제출 예산제도) | 국회 또는 정부 |
| 제출 및 심의 기한 |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 | 제한 없음 |
| 국회의 심의 범위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 불가 | 자유로운 수정 가능 |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
| 효력발생요건 (공포) | 국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 절차 필요 없음 행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공고 | 공포 필요(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 형 식 | 예산의 형식(예산의결주의) | 법률의 형식 |
| 시간적 효력 | 1회계연도에 한정된 한시적 효력 | 폐지 전까지는 계속적 효력 |
| 구속력(대인적 효력) | 국가기관만 구속 | 국가기관, 국민 모두 구속 |
| 효력범위(지역적 효력) | 국내·국외 | 원칙적으로 국내(국외-특별한 경우) |
| 변경·수정(형식적 효력) | 예산으로 법률을 수정할 수 없음 | 법률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음 |
| 관계 | ① 양자의 관계 :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므로,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과 법률이 단순히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음. 예산과 법률은 서로 형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성질과 효력을 달리함. 따라서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② 상호구속성 ㉠ 세출예산이 성립해 있더라도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할 수 없음. ㉡ 법률이 지출을 명하더라도 지출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실제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음. ㉢ 국회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둔 경우 국회의 예산심 의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세입 변동이 예측되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음. ③ 재정소요 추계 : 재정이 소요되는 법령안 제·개정시 법령안 시행일부터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해야 함. | |

31 다음 <보기>의 공무원 부패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2018 국가9급

- ㉠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 ① ㉠ 제도화된 부패 ㉡ 회색 부패 ㉢ 일탈형 부패 ㉣ 생계형 부패
- ② ㉠ 일탈형 부패 ㉡ 생계형 부패 ㉢ 조직 부패 ㉣ 회색 부패
- ③ ㉠ 일탈형 부패 ㉡ 백색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비거래형 부패
- ④ ㉠ 조직 부패 ㉡ 백색 부패 ㉢ 생계형 부패 ㉣ 비거래형 부패

해설

- ① **일탈형 부패(우발적 부패)** : 부정적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는 부패로서 연속성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예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 크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규모가 크거나 권력자가 개입된 경우 제도화된 부패처럼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음.
- ② **백색부패** :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심리적으로 용인되고 합리화되기 때문에 사회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부패의 정당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큰 확산의 동기가 됨(예 공무원출퇴근카드 허위체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예 금융위기시 "한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라고 한 경제관료의 거짓말). 비록 공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에 해당되지만 사익을 추구하려는 악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뿐임.

- ㉔ **제도화된 부패(체제적 부패)** : 부패가 일상화·제도화·관습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부패. 적발되어도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되며 부패가 생활양식화 되어 크게 죄의식 없이 이루어짐(예 관행화된 급행료).
- ㉕ **사기형[단독형·비거래형] 부패** : 상대방과 직접적 이익교환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일방적 부패(비거래형 부패)로서 의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공금유용·횡령·회계부정 등을 통해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며 대개 형법상 범죄에 해당.

답 ③

☞ **공직부패의 유형**

1. 부패의 성격

| | |
|--------------------------|-------------------------------------------------------------------------------------------------------------------|
| 직무유기형 부패 (복지부동) | 시민이 개입되지 않은 관료 개인의 부패로서, 직접적이며 명백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직무를 게으르게 하는 데에서 오는 부패. |
| 후원형[정실형] 부패(정실주의) | 관료가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후원하는 부패. 직무유기형 부패처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음. |
| 사기형[단독형] 부패 (공금유용·횡령) | 상대방과 직접적 이익교환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일방적 부패(비거래형 부패)로서 의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공금유용·횡령·회계부정 등을 통해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며 대개 형법상 범죄에 해당. |
| 거래형 부패(뇌물수수) | 가장 전형적인 부패, 공무원과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쌍방적 부패. |
| 위협형 부패 (갈취형·공갈형) |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공무원 부정행위. |
| 독직(瀆職)행위 | 공직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2. 부패의 규모

| | |
|------------------|------------------------------------------------------------------------------------------------------------------------------------------------------------------------------------------------------------|
| 생계형 부패 | 하위직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부패. 작은 부패 (petty corruption)라고도 함. 방지 방안으로 적정 보수(생계급)의 지급이 필요. * 생계형 부패와 달리 부의 축적을 위한 부패를 치부형(致富型) 부패라고 함. |
| 권력형 부패 (정치부패) | 주로 정계·관계·재계의 권력엘리트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며 정치인이 주축이 되므로 정치부패라고도 함. 관료부패보다 더 암묵적이고 노출되지 않으며 주로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에서 관료부패와 성격이 다름. 희소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초과적인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이므로 엄정한 적발과 처벌, 공정한 법집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3. 부패의 제도화 여부 - 제도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

| | |
|---------------------|-----------------------------------------------------------------------------------------------------------------------------------------------------------------------------------------------------------------------------------------------------------------------------------------------------------------------------------------------------------------------------------------------------------------------------------------------------------------------------------------------------------------------------------------------------------------------------------------------------------------------------------------------------------------------------------------------------------------------------------------------------------------------------------------------------------------------------------------------------------|
| 제도화된 부패 (체제적 부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의 : 부패가 일상화·제도화·관습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부패. 적발되어도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되며 부패가 생활양식화 되어 크게 죄의식 없이 이루어짐(예 관행화된 급행료). ② 효과 : 개별적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식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신·불화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생존·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점에서 현대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 ③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㉑ 형식주의 : 반부패선언을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사실상 위반을 방조·은폐함. ㉒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반부패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사람이나 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은 보복을 당하는 상황. 조직적 은폐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 ㉓ 부패행위자의 보호와 관대한 처분 :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받음. ㉔ 부패의 타성화 : 조직 내의 전반적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며, 강력한 외적 압력이 없는 한 부패를 중단하려 하지 않음. ㉕ 통제자의 책임 회피 : 부패 적발의 공식적 책임자가 공식적 책무수행을 꺼림. |
| 우발적 부패 (일탈형 부패) | 부정적 관행이나 구조보다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는 부패로서 연속성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 크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규모가 크거나 권력자가 개입된 경우 제도화된 부패처럼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음. |

4. 사회구성원의 관용도(부패의 용인가능성)

| | |
|------|-------------------------------------------------------------------------------------------------------------------------------------------------------------------------------------------------------------------------------------------------------------------------------------------------------------------------------------------------------------------------|
| 흑색부패 |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처벌을 원하며 형법·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관련 법 등에 처벌조항을 둠. |
| 백색부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심리적으로 용인되고 합리화되기 때문에 사회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부패의 정당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큰 확산의 동기가 됨 ②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예 금융위기시 "한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라고 한 경제관료의 거짓말). 비록 공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에 해당되지만 사익을 추구하려는 악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뿐임. |
| 회색부패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중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비난과 용인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기 어려움.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으나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예) 촛지, 소액규모의 접대 등 |

5. 기타

| | | |
|------------|--------|-------------------------------------------------------------------------------------|
| 부패발생 수준 | 개인부패 | 개인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로 대부분의 부패는 개인부패 유형에 속함. |
| | 조직부패 | 하나의 부패사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 혹은 집단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음. |
| 부패 당사자 | 내부부패 | 정부관료제 내부에서 공무원 간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부패. 예) 인사청탁 상납금 수수, 피감사부서 직원이 감사부서 직원에게 뇌물 제공 등 |
| | 외부부패 | 관료와 국민 간에 이루어지는 부패 |
| 행위의 적극성 | 적극적 부패 |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 예) 공금횡령, 직권남용 |
| | 소극적 부패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예) 불친절, 업무지연, 무사안일, 감독소홀 |

32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09 지방9급

-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이하 법규정은 국가재정법 규정

① (○) ② (×) 이용은 국회의 사전의결을 요하지만 이체는 국회의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 (×) 명시이월의 경우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재이월할 수 없다.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 1. 명시이월비
 -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구 분 | 사전예측 | 예산형식에 포함 | 국회의 사전승인 | 재이월 | 사용 사례 | 공통점 |
|------|---------|----------|-----------------|-----|-------|---------|
| 명시이월 | 사전예측 가능 | ○ | 필요(예산형식에 포함됨) | 가능 | 적음 | 회계연도독립의 |
| 사고이월 | 불가피한 사유 | × | 불필요(사전의결원칙의 예외) | 금지 | 많음 | 원칙의 예외 |

④ (×) 계속비 지출연한의 연장은 국회의 의결이 거쳐 가능하다.

제23조(계속비)

-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답 ①

33 다음 중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지방7급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형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해설

① (×) 합리모형은 “어떻게 예산상의 이익(편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며 목표달성이 극대화되도록 경제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합리적·분석적 과정을 통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규범적 예산결정방식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이 어떠해야 한정된 재원을 능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지 근거와 기법을 제공하는 규범적·이상적·연역적 성격이 강하다.

② (×) 점증모형은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제어가 곤란하다.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기준 예산(ZBB) 같은 합리모형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제어가 가능하다.

- ③ (x) 점증주의의 특징이다. 점증주의자인 윌다브스키(A. Wildavsky)에 따르면 예산관료는 예산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점증주의적인 규칙을 사용하게 된다. 복잡성에 직면하면 **계산의 보조수단(aids to calculation)**으로서의 행태를 보이는데, 예산결정은 **경험적(experiential)·점증적(incremental)**이며 **단순화(simplified)**되고 예산 관료는 **만족화(satisfice)** 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예산관료는 **그럭저럭 헤쳐 나가고(get by to come out all right)**, **골칫거리를 피하며(avoid trouble)**, **최악을 피하려(avoid the worst) 한다**.
- ㉠ 예산은 경험적이다. 예산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어렵잡아 처리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정한다.
 - ㉡ 예산은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전체의 비용을 따지기보다는 이에 관련된 품목의 비용, 예컨대 인건비, 행정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단순화한다.
 - ㉢ 예산관리자들은 H. Simon이 주장한대로 **최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만족화를 추구하면서 최악의 상태를 회피하는 데 관심을 둔다**.
 - ㉣ 예산은 포괄적이 아니라 점증적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난해의 예산이다.

■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바움가트너(F. Baumgartner)와 존스(B. Jones)**

정책변화나 예산변화에 있어서 빈번한 소폭적 변화와 간헐적인 대폭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기존의 점증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이론으로 정책이나 예산은 균형상태(equilibrium)가 지속되다가 단절적인 변화(punctuation)가 발생하고 다시 균형상태가 지속된다는 이론. 단절은 대폭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고, 균형은 소폭적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는 이유와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 ④ (○) ■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Theory) - 서메이어(K. Thur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

- ㉠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자 또는 조직은 다양한 합리성을 내포하고 다양한 합리성에 근거한 목적들을 추구하여 예산에 관련된 결정을 한다는 이론(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을 통합**). 기존 예산결정론이 완전한 합리성(full rationality)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중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예산결정자와 예산결정기관 내에 다중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봄(예산결정과정의 가진 복잡성을 이론으로 포섭).
- ㉡ **중앙예산기구**는 반대자(adversary), 통로(conduit), 촉진자(faciliator),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 지지자(advocate)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정치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을,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 예산결정자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됨.
- ㉢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을 중심으로 각 예산주기 간의 관계, 정보의 흐름, 예산상의 역할, 최종 지출계획을 결정하는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고자 함
- ㉣ 정부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예 Rubin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
- ㉤ 조직 내에 다양한 합리성이 공존하며 특정 유형의 합리성만이 유일하게 조직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중기준의사결정이론**, **다중합리성조직이론**, **관료제재량권이론**과 같은 맥락.

■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real time budgeting : RTB)**

성질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된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5가지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모형을 제시. 기본적으로 예산 정치에 관한 모형이며 예산 운영은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에 개방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외부 요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시간(real time)이란 한 결정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다른 결정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정보와 결정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사결정 흐름 | 개념 | 정치 | 관심 |
|---------|--------------------|------------------|--------------------------------------------------|
| 세입 흐름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 설득의 정치 |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세입원의 제약 조건 변경 여부·방법 결정 |
| 세출 흐름 |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 선택의 정치 | 기준예산의 기술적 추계,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
| 예산균형 흐름 |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제약조건의 정치 |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
| 예산집행 흐름 |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 책임성의 정치 | 집행의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기술적 성격 강함) |
| 예산과정 흐름 | 누가,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납세자인 시민과 예산 배분결정자인 정부관료 간의 결정 권한의 균형 |

답 ④

34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9급

- 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 ②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제도의 일종으로 경제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③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 ④ 부채의 증가는 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 ② (x) 자본예산은 복식예산(double budget)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지만, 자본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여 단기적으로 불균형예산(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자본예산은 불황기에 적자예산에 의해 유효수요증대와 고용증대 수단으로 활용하여 불경기(실업)의 극복에 이용되지만, 정부지출 증가와 통화량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있다.
- ③ (○) 자본계정에서 지출될 대상은 주로 혜택이 장기간에 나타나므로, 공채를 발행하여 미래의 납세자(미래세대)가 부담하게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합치되며 세대 간 자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 ④ (x) 자본예산 운영에 따른 과도한 차입은 부채 증가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예산관리의 경직성을 증가시킨다.

답 ②

35 다음 중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9급(1)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 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을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해설

- ① (×) LIBS는 투입측면에서 지출항목(품목)별로 편성되므로 어떤 목표나 기능에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 ② (△) PBS는 기능별 분류(주요사업) → 사업별 분류(program : 단위사업) → 세부사업(project) 또는 활동(activity)으로 분류하여 세부사업 및 활동별로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이나 산출물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투입요소 중심으로'라는 표현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단지, 업무단위 한 단위를 산출 또는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단위원가를 투입요소로 보아 해석하면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지문이 모두 틀리고, ②번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②를 답으로 한다.
- ③ (×) MBO는 부서별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 작성시 부서별 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지출 목적을 더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MBO는 상관과 부하가 함께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권적·참여적·상향적 예산결정 방식**에 해당한다.
- ④ (×) ZBB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모두 분석하되, **기존사업의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더 사용된다.**

답 ②

36 다음 중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 ②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 ③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 ① (×)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예산의 한정성 원칙

| | | |
|-------------------------|-------------------------------------------------------------------------------|--------------------------------------------------------------------------|
| 양적 한정성(초과지출 금지) | 금액 한도의 제한. 예산에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 금지. | 예외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
|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 비용의 용도(費度)·목적의 제한. | 예외 이용(移用), 전용(轉用), 예비비 |
| 시기적 한정성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 1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 한 회계연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재정건전성 요청에서 나온 원칙. | 예외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지난 연도 수입(과년도 수입), 지난 연도 지출(과년도지출), 긴급배정 |

답 ①

| 전통적 예산원칙과 예외, 현대적 예산원칙 | | | |
|------------------------|-----------------------------------------------|----------------------------------------------------------------------------------------------|----------------------------------------------------------------------------------------------------------------------------------------------------------------------------------------|
| 전통적 예산원칙 | | | 현대적 예산원칙 |
| 유형 | 내용 | 예외 | |
| 공개성 | 국민에게 공개 | 신임예산, 국가정보원 예산(정보비)이나 국방부 일부 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책임 • 행정부재량 • 행정부계획 • 예산기구 상호 교류 • 보고 • 다원적 절차 • 적절 수단 구비 • 시기신속성 |
| 명확성·명료성 |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 총액(총괄)예산(총액계상예산), 예비비 | |
| 명세성 | 구체적 항목에 따라 세분화 | 총액(총괄)예산 | |
| 엄밀성·정확성 (accuracy) | 예산(예정) = 결산(확정) *세입 = 세출(수지균형)도 포함하는 견해 있음 | 예산불용액, 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장치로 인한 예산·결산 간 불일치 *엄밀성을 세입 = 세출로 볼 경우 흑자예산, 적자예산 | |
| 한정성 (periodicity) | 양적 한정성(초과지출 금지) |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 |
| |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 이용, 전용, 예비비 | |
| | 시기적 한정성 (회계연도독립원칙) |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지난 연도 수입·지출, 긴급배정 | |
| 단일성 |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예산 | |
| 통일성 |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결 금지.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 기금,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 사전의결 원칙 |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공공기관의 예산,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선결처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 |
| 완전성·포괄성 예산총계주의 | 모든 세입·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포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공공기관 예산, 기금, 정부의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

37 다음 중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하였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 ② 사업 주무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해설

② (x)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며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전에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에 초점을 둔다.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타당성조사이다.

| 구분 | 예비타당성 조사 | (본)타당성 조사 |
|------------|------------------------------------------|--------------------------------------|
|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 여부와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조사 |
| 조사주체 | 기획재정부 | 주무부처(사업시행기관) |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x(단, 지능정보화 사업은 기술성 분석을 포함) | ○(토지형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
| 정책적 분석 | ○ | x(검토대상이 아님) |
| 경제성 분석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개략적 수준의 경제성 분석 |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의 경제성 분석 |
| 조사기간 | 단기적 | 장기적 |
| 조사대상 | 종합적 조사-해당 사업과 함께 가능한 모든 대안(후보사업)을 검토 | 해당 사업만 대상으로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 ① **의의** :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도입.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담당 부처의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 ② **대상사업** : 다음 해당 신규 사업
 -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 **분석 방법**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성 분석을 포함. 단,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 | |
|------------|-------------------------------------------------------------------------------------------------------------------------------------------------------------------------------------------------------------------------------------------------------------------------------------------------------------------------|
| 경제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기본분석 방법은 비용-편익분석(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비용편익분석 부적합시 비용-효과분석 가능. • 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
| 정책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정책일치성, 사업수용성), 정책 효과(사회적 가치), 사업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위험성, 기타)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사업특수평가항목은 선택적). • 재원조달위험성, 문화재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특수평가항목에 반영. •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
| 지역균형 발전 분석 |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
| 기술성 분석 |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분석 |

답 ②

38 다음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7급(1)

-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해설

② (x)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 속도와 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 혁명이다.

답 ②

| ✦ 4차 산업혁명 | | | | | |
|-----------|-----------------------------------------------------------------------------------------------------------------------------------------------------------------------------------------------------------------------------------------------------------------------------------------------------------------------------------------------------------------------------------------------------------------------------------------------------------------------------------------------------------------------------------------------------------------------------------------------------|-------------------------|-------------------|-----------|---------------------------------------------------------------------------|
| 의의 | 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 등 핵심기술이 상용화에 의한 '초연결형·초지능형 자동화시대'로의 사회변혁 ② 클라우드 슈바브(K. Schwab)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 ③ 3차 산업혁명(지식·정보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물리시스템 구축. ■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 :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 속도·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혁명.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활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생산체제 도입을 의미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치의 생산을 의미하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집된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빅데이터 분석)하고,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핵심으로 함. | | | | |
| | 구분 | 1차 산업혁명 | 2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
| | 혁신기제 | 동력혁명 | 분업화된 자동화 혁명(대량생산) | 지식·정보 혁명 | 초연결성·초지능성·초예측성 혁명 |
| | 특성 | offline 혁명(인간의 신체능력 증강) | | online 혁명 | O2O(online 2 offline), CPS(사이버물리시스템) |
| | 기본기술 | 증기기관 | 전기 | 컴퓨터, 인터넷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모바일, 융합현실, 5G 통신, 로봇공학, 3D프린팅 |
| 정부 | | | 정부 1.0~3.0 | 정부 4.0 | |
| | ■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세계(현실)와 가상세계의 융합(O2O; online 2 offline). 그 동안 산업혁명이 물리적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으로 구분되어 발전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두 공간과 시스템이 결합해 불연속성을 극복. 예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를 이용한 mobile healthcare, 융합현실(Mixed Reality: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등, ■ FAST Government :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미래정부 방향. 수평적이고(flatter), 기민하고(agile), 간결하고(streamlined), 기술역량이 있는 (tech-enabled) 정부. | | | | |
| 특징 | ①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 사물인터넷(IoT)의 진화와 만물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람과 사물, 공간, 시스템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초연결되어 상호의존도가 증폭됨. ②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 super intelligence) : 초연결성에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하여 인간생활의 패턴 파악. 인간과 생물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인간 수준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지능을 갖게 됨(예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정보가 클라우드와의 접목을 통해 하드웨어 자체가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물리적 세계의 객체들이 초지능성을 갖게 됨. ③ 초예측성(hyper-predictability) : 초연결성·초지능성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간 행동을 예측. 딥러닝과 같은 첨단 AI는 스스로 빅데이터의 특징량을 추출해 의미 있는 판단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④ 기타 : 초신뢰혁명(예 블록체인, 암호화폐), 초생명혁명(예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 | | | |

39 다음 <보기> 중 행정통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 국회8급 변형

- ㉠ 일반계서(ordinary hierarchies)는 행정체제 내의 일차적 통제구조에 해당하며 의사결정계층의 연쇄로 구성된다.
- ㉡ 감사원은 전형적인 내부적 독립통제기관이다.
- ㉢ 옴부즈맨은 그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이 원칙이다.
- ㉣ 외부적 통제체제에는 국회, 헌법재판소, 교차기능조직, 국민 등이 포함된다.
- ㉤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행정국가의 불가피성과 외부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계층제는 수직적 계층을 설정하고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한 구조로서 의사결정계층의 연쇄로 구성되고 1차적 통제구조로서 역할을 한다.
- ㉡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내부적 독립통제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합의회 의사결정기구로 직무·인사·예산·규칙제정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헌법기관(헌법에 설치 근거를 둠)이며 두상조직에 해당.
 ■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 : 행정기관의 중앙통제조직으로 일반행정 계서와 대통령,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상당한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니며 행정에 대한 통제작용 수행을 주임무로 하는 조직으로 두상조직에 해당된다. 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두상조직(頭上組織, overhead unit)** : 기관의 지위가 높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사전달통로를 가지는 조직
- ㉢ (×) 옴부즈맨은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행정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직접통제)은 없다. 시정 및 개선 요구(간접통제)는 할 수 있지만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이빨 없는 감시견(teethless watchdog)'이라고도 한다.
- ㉣ (×) 교차기능조직은 내부적 통제체제이다.

■ **교차행정조직(교차기능조직, 교차통제조직)**

- ㉠ **개념** :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관리기능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계선적 운영조직의 관리적 작용을 대신하여 일반운영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 ㉡ **예** : 행정안전부는 정원·조직관리,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 조달청의 물자관리, 법제처의 법령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등).
- ㉢ **기능** : ㉠ 정부전체에 적용될 통제기준 설정, ㉡ 운영상의 권한을 갖는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활동을 감사, ㉢ 계선운영기관의 실적을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 ㉣ 동의권이나 협의권을 가질 경우 계선기관의 일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통제.

㉠ (○)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책임 있는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 개인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내부통제와 내재적 책임을 중시하였다.

답 ③

40 다음 중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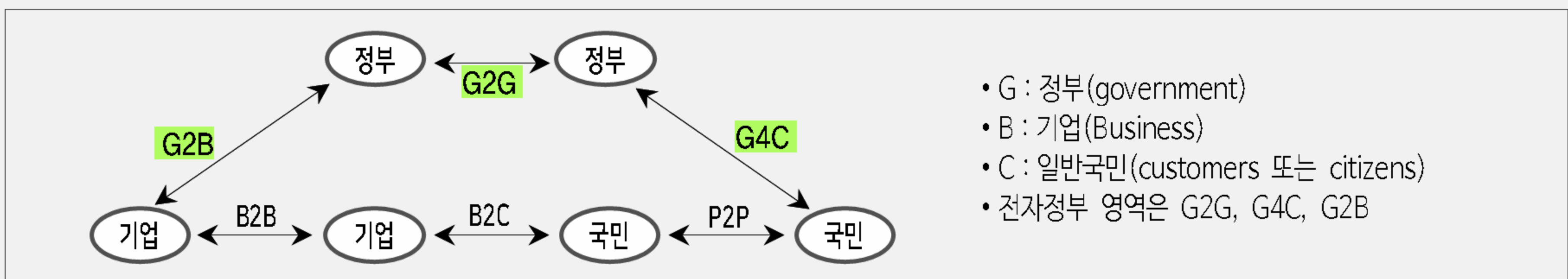
2018 지방7급 변형

-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촉진시켜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준다.
-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변화로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 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비용 및 조달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

해설

③ (×)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상호작용관계에 따른 전자정부의 분류



| G2G(Government to Government) | G4C 또는 G2C(Government to Citizens) | G2B(Government to Busines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간 연계 확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증대 및 거래비용 감소 •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정부와 시민의 연계를 정보화하여 시민참여 촉진과 공공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향상. | 정부와 기업 간 연계의 정보화로 전자상거래 촉진,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증대.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 e-사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식관리시스템(KMS), 정부통합전산센터,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 Business Process System),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 정부가상가설망), smart work center(smart office), G-drive(범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원포털(정부24, 구 민원24) • 국민신문고 • 홈텍스 • 워크넷(workne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GePS, 나라장터) • 전자통관시스템(Universal Pass ; UNI-PASS) |

답 ③